

## 사회자본이 코로나19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를 중심으로

송용찬\* · 김유화\*\*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사회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순응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집단별 코로나정책수용 제고를 위한 사회자본 제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낮았고,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높았다. 둘째,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규범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다. 셋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가 온라인네트워크와는 완전매개효과, 정부신뢰와 규범과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신뢰 관계의 형성,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 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규범에 대한 홍보의 강화, 집단별 선호 매체와 관심분야를 고려한 코로나19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온라인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정책, 사회자본, 정부신뢰, 규범, 정책태도, 정책순응

\* 주저자

\*\* 교신저자

## I. 연구목적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는 2021년 7월말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혼란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응은 2020년 전반 진단 격리 봉쇄에 초점을 두었다가 2020년 말부터 백신 개발과 공급이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고 있으며, 2021년 5월 이후에는 변이바이러스와 백신수용으로 정책적 초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치료제는 개발이 미진한 상태에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능에 대하여도 논쟁적이다. 그 결과 세계적 차원에서 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도 없는 현실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 정책역량은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두었고, 바이오와 디지털을 결합한 진단과 격리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가에 비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월등히 적은 수를 보여 K방역의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들어 확진자가 많았던 서구국가들은 백신을 통해 확진자의 급격한 감소를 이루었던 반면 백신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우리나라는 백신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 부동산가격 급등의 부동산정책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정책불신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의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하민철·한석태(2013)는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대체로 정책수용성이 높아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신과학기술의 수용(김서용 외, 2010), 한·중 FTA 통상정책 수용(정원준, 2017), 원자력정책의 수용(임다희 외, 2016) 등의 연구에서도 정부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정현·정문기(2019)의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이 정책수행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책 순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강권오, 2021).

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유행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범위를 망라한 우리의 삶에 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정목희 외, 2020; 문정화, 2021; 오현진, 2021; 허성민·양지연, 2021; 김태심·조용호, 2021).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문정화 등(2021)은 평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지역소속감이 높을 때 코로나19 두려

움이 컸다고 밝혔다. 정목희 등(2020)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사회적 압력 인식인 주관적 규범이 코비드-19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오현진(2021)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수준이 심각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정부 및 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정부에 대한 신뢰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김태심·조영호(2021)의 연구는 정부성파가 코로나 재난 시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여당 지지층보다는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 중도층에서 영향이 훨씬 컸다. 반면 이동훈 등(2016)의 연구는 국가와 보건의당국에 대한 신뢰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19와 사회적 특성 및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19 대응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대응정책을 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규명한 연구는 미흡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자본과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순응의 관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집단별 정책수용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전략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코로나 19 정책과 정책수용

#### 1) 코로나 19 정책

국가마다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매일 집계 되고 있는 누적 확진자 또는 사망자 수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후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 7월 23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가 185,733명 명, 사망자가 2,066(치명률 1.11%)명으로 발표되었고, 백신 1차 접종은 총 16,723,537명, 접종완료는 6,779,191명으로 발표되었다(질병관리청, 2021. 7.23).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극단적 봉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계와 고용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적극적 금리 인하, 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코로나19가 기업과 국민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선제적이고 디지털이 적용된 진단과 격리의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적 시행으로 K-방역의 명성을 만들어냈다. 이와 더불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확보 전략,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 백신수급 및 수용성 문제, 경제적 지원정책의 선별과 보편 논란 등 다양한 정책적 논쟁이 국가·사회적으로 분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지식정보혁명의 심화와 함께 국가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화와 함께 국민들의 정보 획득역량 강화는 정책에 대한 태도와 수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전에 경험이 없던 팬데믹인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 내지는 거리두기 등의 정책은 규제정책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19 정책이 가진 국민의 자유 내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논란은 정책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정책수용으로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의 관계

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련하여 순응, 불응, 수용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하동엽·김갑성, 2017). 본 연구에서 정책수용(acceptance)을 순응(compliance)과 태도(attitude)의 관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acceptance)은 외면적 행동이 일정한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순응(compliance)과 함께 내면적인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 변화를 의미한다(Duncan, 1981; 정정길 외, 2015 재인용). 정책수용은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정책과 정책대상 집단 간의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윤종빈·김소정, 2019). 정책수용은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외연적 태도변화와 함께 내면적 심리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 그리고 정책의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다(김재근·권기현, 2007).

정책에 대한 태도는 자연적 혹은 사회적 환경에서 정책을 향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지향을 의미하고(고영복, 2000), 정책순응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정정길 외, 2015). 1950년부터 태도와 행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태도변화를 통한 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연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태도와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행동의 발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취약하였다. 즉 태도는 외적인 행동으로부터 주로 추론되지만 행동으로 보지는 않는다(고영복, 2000). 수용(attitude)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Dreyer & Walker, 2013 ; 하동엽·김갑성, 2017 재인용).

모든 공공정책은 정부가 정한 목적이나 규칙을 정책대상집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Anderson, 1984).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다수 정책대상집단의 수용 확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많은 정책사례를 통해 나타났다(정정길 외, 2015 ; 민기, 2009). 민기(2009)는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실패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성찰의 부재에 문제가 있다면서 성별, 연령, 소득 등의 개인적 특성이 정책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코로나19 정책수용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며 코로나19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지만 국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정책수용을 정책대상자인 국민이 내면적 가치관까지 일치하며 코로나19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정도 내지 수준과 국민이 코로나19정책에 대한 외면적 행동변화로 정의하고, 코로나19정책에 대한 태도와 순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회자본과 정책수용

### 1) 사회자본의 의의와 구성요인

정치학자 Tocqueville(1835)에 의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80년대 후반 Bourdieu(1986)와 Coleman(1988), Putnam(1995)에 의해 연구가 확대되어왔다. 이후 한국에서도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 논의의 활성화는 개인, 집단, 조직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이해하는 준거의 틀로서 기존의 사회 각 단위별 개별 접근보다 이들 간 관계성에 놓인 특징이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이준호, 2010).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즉 집단을 형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를 의미한다(김혜연, 2011). 사회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하여 집단이나 조직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자본과 유사한 생산성을 가진다(Coleman, 1990). 사회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금전적 자본과는 달리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자본의 풍부성과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 사이에는 선순환 구조 형성가능성이 있다(Coleman, 1988 ; Putnam, 1993: 1995).

대표적인 학자인 Putnam은 사회자본에 대해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와 같은 것이 사회조직의 상호이익을 위하고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특히 서로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Putnam, 1993: 1995). 박희봉·송용찬(2018)의 연구에서도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 지면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해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소통을 분석한 김구(2010)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통은 온라인 사회자본뿐만 아니라 면대면 오프라인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보다는 면대면 오프라인의 사회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은 비면대면 사회자본 형성은 물론 면대면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매개 채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공식적 네트워크는 조직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고, 네트워크는 개인 간의 정보 교환 수준과 특정 정책문제와 관련된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Jones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로 사회자본을 구성하였다.

## 2) 사회자본과 정책수용의 관계

사회자본과 정책수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정책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trust)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Fukuyama(1996)가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자본 중 신뢰는 사회의 특정 부분에 정착하였을 때 생기며, 특정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설명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며,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신뢰가 중요하고 정책수용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정원준, 2017; 주경일, 2017; 왕재선, 2019; 문영세, 2019; 조영호, 2019; 오현진, 2021).

많은 연구들은 사회자본과 바람직한 정책 결과 사이에 상당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준환, 2005). 다양한 경험적 맥락에서 제도신뢰가 정책 계획 및 실행과 연계되고, 이는 사회적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Jones et al., 2012). 하민철·한석태(2013)는 도시지역의 사회자본 수준과 정책수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기철(2013)의 관광개발 정책수용태도와 관광 성과인식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즉, 상호신뢰, 상호네트워크, 상호정보교류의 순으로 정책수용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정책 사례에 대한 왕재선(2019) 연구에서도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가 정책수용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기후 변화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는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 수준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Auer et al., 2020). 주민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고 신뢰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촉진정책의 도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Jones & Clark, 2014). 정정길 등(2015)은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와 신뢰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공중 간 신뢰

관계 형성이 정책순응의 주요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주경일(2019)은 저조한 관계적 신뢰가 정책불응의 주요인이라고 규명하였다. 임다희 등(2016)의 연구에서 정부신뢰는 위협인식은 낮추고 편익인식은 높이고,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은비 등(2019)의 지역관광축제 연구는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형성, 정책성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버넌스 형성은 사회자본과 정책성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수관(2013)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이 환경보호와 같이 공익 또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허거훈·정혜진(2020)의 연구는 사회자본의 변인들 가운데 가교형 사회자본, 특정신뢰, 일반신뢰 수준이 이민자에 대한 수용인식과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신경아·한미정(2009)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이 에너지 절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의 변인들 중 규범과 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의 변인 중 규범요인만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임과 동시에 모델의 설명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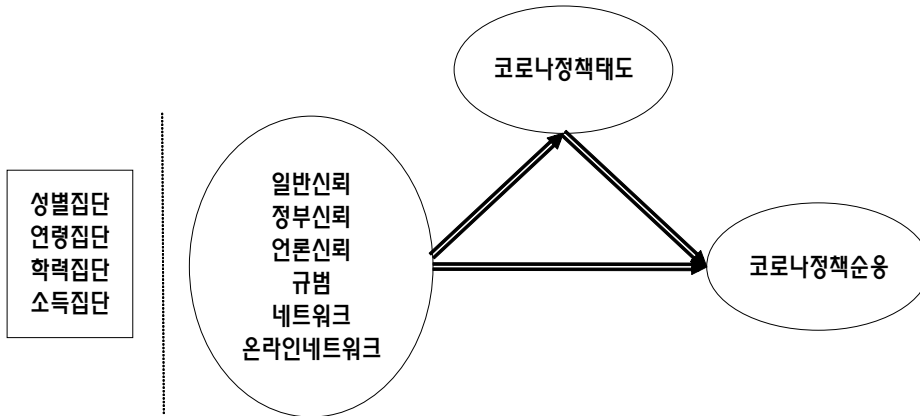
### Ⅲ. 연구 설계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성들의 측정도구는 다양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Putnam(1993)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개의 구성요소를 사회자본으로 보고, 이에 지식혁명시대의 특성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신뢰의 경우도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정책수용은 정책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변화인 순응을 포함하고(하동엽·김갑성, 2017), 태도와 순응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취약하다는 논의(고영복, 2000)에 기초해 코로나19 정책수용은 코로나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으로 구분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집단, 연령집단, 학력집단, 소득집단을 선정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는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2. 설문지의 구성

사회자본 설문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신뢰는 신뢰대상에 따라 이웃과 처음만난 사람에 대한 일반신뢰,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정부신뢰, 언론(TV, 신문, SNS)에 대한 언론신뢰로 구분되었다. 규범은 법규 준수 등 공공 정신,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는 직·간접 호혜성(Newton, 1997)을 측정하였다. 네트워크는 의사소통 채널(이웃, 기초의회, 기초정부)과 지역 활동 참여·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온라인네트워크는 신경아·한미정(2009)의 측정 변수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정책수용은 요인분석을 통해 정책태도와 정책수용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태도에 관한 문항(코로나 검사 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정책 등)과 정책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의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5월 12일~5월 22일이며, 유효하게 응답한 674매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보면, 남자가 275명 40.8%, 여자가 399명 59.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86명 42.4%로 가장 많았고, 40대 152명 22.6%, 60대 이상 120명 17.8%의 순을 보였다. 학력은 대졸이 408명 60.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재학이상이 192명 28.5%, 고졸이하가 74명 11.0%의 순을 보였다. 월소득은 200-400만원이 212명 31.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미만이 145명 21.5%, 400-600만원이 141명 20.9%, 600만원 이상이 99명 14.7%의 순을 보여주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75	40.8
	여자	399	59.2
연령대	20대	62	9.2
	30대	54	8.0
	40대	152	22.6
	50대	286	42.4
	60대이상	120	17.8
학력	고졸이하	74	11.0
	대졸	408	60.5
	대학원재학이상	192	28.5
월소득	200만원미만	145	21.5
	200-400만원미만	212	31.5
	400-600만원	141	20.9
	600만원이상	99	14.7
	없음	77	11.4
전체		674	100.0

수집된 설문지는 SPSS통계패키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자료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설문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해 수해하여 사회자본, 코로나정책태도, 코로나정책순응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로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태도 및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순응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측정요인의 기본 특성분석

사회자본 요인 중 일반신뢰 2.94, 정부신뢰 3.06, 언론신뢰 2.52, 규범 3.70, 네트워크 2.85, 온라인네트워크 2.99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매우 낮았고, 정부신뢰와 일반신뢰는 보통 수준을 보였다.

〈표 2〉 사회자본의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일반신뢰	674	2.94	0.90
정부신뢰	674	3.06	0.89
언론신뢰	674	2.52	0.91
규범	674	3.70	0.61
네트워크	674	2.85	0.97
온라인네트워크	674	2.99	0.88

코로나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코로나정책태도는 3.44, 코로나정책순응은 3.88로 국민들의 코로나 정책순응이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정책수용 특성요인의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코로나정책태도	674	3.44	0.91
코로나정책순응	674	3.88	0.74

### 2.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집단별 코로나정책태도 영향요인 분석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남성			여성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3.733	0.000		3.027	0.003
일반신뢰	-0.174	-3.469	0.001	-0.085	-1.754	0.080
정부신뢰	0.592	11.621	0.000	0.570	12.022	0.000
언론신뢰	-0.113	-2.449	0.015	-0.037	-0.900	0.369
규범	0.179	3.710	0.000	0.142	3.238	0.001
네트워크	0.118	2.189	0.029	0.007	0.129	0.897
온라인네트워크	0.101	1.908	0.057	0.130	2.676	0.008
	수정R <sup>2</sup> =.461, F=40.001, p=.000			수정R <sup>2</sup> =.398, F=44.850, p=.000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233$ ,  $p=0.267$ 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태도의 46.1%를 설명하고, 여성의 회귀모형은 39.8%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남성은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은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신뢰와 규범이 정(+)적 영향을 미쳤고, 정부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규범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부신뢰와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높았으며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일반신뢰와 언론신뢰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정책태도와 상반된 방향성을 보여주어 언론에 대한 불신과 국민과 이웃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네트워크의 경우 남성은 오프라인이 유의했던 반면 여성은 온라인이 유의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정책태도에의 네트워크 영향이 차별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477	0.142		1.750	0.082		4.178	0.000		2.557	0.012
일반신뢰	-0.129	-1.576	0.118	-0.090	-1.087	0.279	-0.129	-2.411	0.017	-0.223	-2.951	0.004
정부신뢰	0.626	7.374	0.000	0.548	6.794	0.000	0.556	10.290	0.000	0.633	8.042	0.000
언론신뢰	-0.084	-1.148	0.253	0.040	0.609	0.543	-0.112	-2.300	0.022	-0.063	-0.780	0.437
규범	0.150	1.909	0.059	0.098	1.492	0.138	0.138	2.680	0.008	0.211	2.765	0.007

네트워크	0.112	1.309	0.193	-0.013	-0.147	0.884	0.031	0.528	0.598	0.015	0.190	0.850
온라인 네트워크	0.088	1.108	0.270	0.223	2.635	0.009	0.156	2.649	0.009	0.005	0.063	0.950
	수정R <sup>2</sup> =.453, F=16.847, p=.000			수정R <sup>2</sup> =.404, F=18.053, p=.000			수정R <sup>2</sup> =.384, F=30.653, p=.000			수정R <sup>2</sup> =.428, F=15.835, p=.000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260$ ,  $p=0.739$ 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30대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태도의 45.3%를 설명하고, 40대의 회귀모형은 40.4%, 50대의 회귀모형은 38.4%, 60대 이상의 회귀모형은 42.8%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30대는 정부신뢰, 40대는 정부신뢰, 온라인네트워크, 50대는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60대 이상의 경우 일반신뢰, 정부신뢰, 규범이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연령대에서 정부신뢰만이 코로나정책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정부신뢰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0대와 50대가 온라인네트워크가 높으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규범준수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일반신뢰, 50대는 언론신뢰가 낮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재학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197	0.235		2.405	0.017		3.745	0.000
일반신뢰	-0.063	-0.538	0.592	-0.090	-2.039	0.042	-0.154	-2.296	0.023
정부신뢰	0.624	5.909	0.000	0.529	11.868	0.000	0.673	10.295	0.000
언론신뢰	-0.094	-0.979	0.331	-0.042	-1.049	0.295	-0.098	-1.718	0.088
규범	0.114	1.189	0.239	0.214	5.212	0.000	0.029	0.440	0.661
네트워크	0.204	2.011	0.048	0.000	-0.008	0.993	0.075	1.076	0.283
온라인 네트워크	0.042	0.438	0.663	0.147	3.147	0.002	0.135	1.959	0.052
	수정R <sup>2</sup> =.476, F=12.040, p=.000			수정R <sup>2</sup> =.407, F=47.613, p=.000			수정R <sup>2</sup> =.459, F=28.004, p=.000		

분석결과 학력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691$ ,  $p=0.429$ 로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졸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태도의 47.6%를 설명하고, 대졸의 회귀모형은 40.7%, 대학원재학이상의 회귀모형은

45.9%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고졸은 정부신뢰와 네트워크, 대졸은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대학원재학이상은 일반신뢰,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학력집단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정부신뢰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대졸이상은 일반신뢰와 코로나정책태도가 상반된 방향성을 보였고, 고졸은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대졸은 규범준수와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코로나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득)

	200만원미만			200-400만원			400-600만원			600만원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428	0.155		2.863	0.005		2.535	0.012		3.562	0.001
일반신뢰	-0.083	-1.056	0.293	-0.109	-1.769	0.078	-0.097	-1.192	0.235	-0.308	-3.735	0.000
정부신뢰	0.508	6.855	0.000	0.592	9.827	0.000	0.647	8.165	0.000	0.796	9.287	0.000
언론신뢰	0.026	0.386	0.700	-0.031	-0.549	0.584	-0.252	-3.545	0.001	-0.153	-2.095	0.039
규범	0.129	1.850	0.066	0.123	2.149	0.033	0.197	2.759	0.007	0.147	1.824	0.071
네트워크	-0.043	-0.502	0.616	0.099	1.453	0.148	0.032	0.390	0.698	0.015	0.169	0.866
온라인 네트워크	0.319	3.720	0.000	0.058	0.874	0.383	0.075	1.016	0.311	-0.008	-0.090	0.929
	수정R <sup>2</sup> =.398, F=16.866, p=.000			수정R <sup>2</sup> =.390, F=23.486, p=.000			수정R <sup>2</sup> =.436, F=19.004, p=.000			수정R <sup>2</sup> =.529, F=19.367, p=.000		

분석결과 소득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3.180$ ,  $p=0.365$ 로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0만원미만 소득집단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태도의 39.8%를 설명하고, 200-400만원집단의 회귀모형은 39.0%, 400-600만원집단의 회귀모형은 43.6%, 600만원 이상집단의 회귀모형은 52.9%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0만원미만은 정부신뢰와 온라인네트워크, 200-400만원은 정부신뢰, 규범, 400-600만원은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600만원이상은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소득집단에서 정부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에 정(+ )적 영향을 가져 정부신뢰가 높으면 코로나정책태도가 긍정적이었다. 400만원이상의 언론신뢰, 600만원이상 집단의 일반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00-600만원은 규범준수와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 집단별 코로나정책순응 영향요인 분석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남성			여성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5.156	0.000		7.684	0.000
일반신뢰	-0.091	-1.609	0.109	0.063	1.187	0.236
정부신뢰	0.170	2.941	0.004	0.182	3.484	0.001
언론신뢰	-0.108	-2.068	0.040	-0.056	-1.220	0.223
규범	0.379	6.935	0.000	0.337	7.012	0.000
네트워크	0.134	2.202	0.029	0.132	2.340	0.020
온라인네트워크	0.181	3.041	0.003	0.022	0.411	0.682
	수정R <sup>2</sup> =.311, F=21.586, p=.000			수정R <sup>2</sup> =.273, F=25.921, p=.000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0.482$ ,  $p=0.487$ 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순응의 31.1%를 설명하고, 여성의 회귀모형은 27.3%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남성은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성은 정부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은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언론신뢰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온라인네트워크가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864	0.065		4.894	0.000		6.822	0.000		4.901	0.000
일반신뢰	-0.093	-1.150	0.253	0.009	0.087	0.930	-0.031	-0.522	0.602	-0.042	-0.453	0.651
정부신뢰	0.244	2.897	0.005	0.161	1.706	0.090	0.139	2.355	0.019	0.192	1.960	0.052

언론신뢰	-0.090	-1.241	0.217	-0.001	-0.013	0.989	-0.071	-1.327	0.186	-0.151	-1.498	0.137
규범	0.464	5.938	0.000	0.252	3.270	0.001	0.383	6.772	0.000	0.333	3.515	0.001
네트워크	0.240	2.827	0.006	0.123	1.215	0.226	0.040	0.638	0.524	0.110	1.103	0.272
온라인 네트워크	0.098	1.236	0.219	0.110	1.106	0.271	0.165	2.569	0.011	-0.060	-0.609	0.544
	수정R <sup>2</sup> =.459, F=17.271, p=.000			수정R <sup>2</sup> =.181, F=6.563, p=.000			수정R <sup>2</sup> =.261, F=17.767, p=.000			수정R <sup>2</sup> =.116, F=3.614, p=.003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12.839$ ,  $p=0.005$ 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30대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 정책수용의 45.9%를 설명하고, 40대의 회귀모형은 18.1%, 50대의 회귀모형은 26.1%, 60대 이상의 회귀모형은 11.6%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30대는 정부신뢰, 규범, 네트워크, 40대는 규범, 50대는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60대 이상은 규범이 코로나정책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연령집단에서 규범만이 코로나정책수용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높으면 코로나정책수용행동이 긍정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20-30대는 정부신뢰와 네트워크가 긍정적 관계를, 50대는 정부신뢰와 온라인네트워크가 긍정적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학력에 따라 코로나정책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코로나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력)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재학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2.134	0.037		5.578	0.000		7.524	0.000
일반신뢰	0.151	1.201	0.234	-0.022	-0.456	0.648	-0.040	-0.500	0.617
정부신뢰	0.269	2.356	0.021	0.167	3.465	0.001	0.147	1.875	0.062
언론신뢰	-0.027	-0.260	0.795	-0.051	-1.193	0.233	-0.204	-2.990	0.003
규범	0.253	2.432	0.018	0.439	9.889	0.000	0.241	3.086	0.002
네트워크	0.067	0.606	0.547	0.095	1.785	0.075	0.259	3.114	0.002
온라인 네트워크	0.221	2.140	0.036	0.079	1.555	0.121	0.067	0.817	0.415
	수정R <sup>2</sup> =.386, F=8.640, p=.000			수정R <sup>2</sup> =.308, F=31.134, p=.000			수정R <sup>2</sup> =.226, F=10.275, p=.000		

분석결과 학력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3.143$ ,  $p=0.208$ 로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졸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수용의 38.6%를 설명하고, 대졸의 회귀모형은 30.8%, 대학원재학이상의 회귀모형은 22.6%를 설명

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고졸은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 대졸은 정부신뢰, 규범, 대졸이상은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학력집단에서 규범만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고졸이하와 대졸은 정부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원재학이상은 언론신뢰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네트워크는 대학원재학이상 집단, 온라인네트워크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득에 따라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소득)

	200만원미만			200-400만원			400-600만원			600만원이상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베타	t	p
(상수)		1.648	0.102		6.196	0.000		4.814	0.000		4.806	0.000
일반신뢰	0.013	0.169	0.866	0.039	0.557	0.578	0.050	0.516	0.606	-0.225	-2.237	0.028
정부신뢰	0.036	0.489	0.626	0.117	1.714	0.088	0.340	3.593	0.000	0.386	3.702	0.000
언론신뢰	0.031	0.469	0.640	-0.111	-1.701	0.090	-0.202	-2.379	0.019	-0.120	-1.347	0.181
규범	0.487	7.020	0.000	0.245	3.758	0.000	0.312	3.653	0.000	0.448	4.558	0.000
네트워크	0.150	1.765	0.080	0.278	3.586	0.000	-0.077	-0.786	0.433	0.090	0.838	0.404
온라인 네트워크	0.204	2.387	0.018	0.055	0.729	0.467	0.010	0.109	0.913	-0.093	-0.823	0.413
	수정R <sup>2</sup> =.399, F=16.915, p=.000			수정R <sup>2</sup> =.216, F=10.692, p=.000			수정R <sup>2</sup> =.194, F=6.608, p=.000			수정R <sup>2</sup> =.304, F=8.129, p=.000		

분석결과 소득에 따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회귀모형 차이분석결과  $X^2=6.710$ ,  $p=0.082$ 로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0만원미만 소득의 회귀모형은 사회자본 요인이 코로나정책순응의 39.9%를 설명하고, 200-400만원의 회귀모형은 21.6%, 400-600만원의 회귀모형은 19.4%, 600만원이상의 회귀모형은 30.4%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200만원미만은 규범과 온라인네트워크, 200-400만원은 규범과 네트워크, 400-600만원은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600만원이상은 일반신뢰, 정부신뢰, 규범이 코로나정책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소득집단에서 규범만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쳐 공동체내에 규범준수의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온라인네트워크는 200만원미만, 네트워크는 200-400만원에서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400만원이상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400-600만원은 언론신뢰, 600만원이상은 일반신뢰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3. 사회자본의 정책수용에의 영향경로에서 정책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역할의 검증을 위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사회자본 변수 중 일반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정부신뢰, 언론신뢰, 규범,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코로나정책태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 효과가 둘째 단계에서의 효과보다 작아진 변수는 정부신뢰, 규범, 온라인네트워크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일반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언론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와 코로나정책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수용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반신뢰, 언론신뢰, 네트워크가 코로나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신뢰와 규범은 3단계의 영향이 2단계의 영향보다 작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온라인네트워크는 3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아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표 12>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수용에서 정책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변수	독립변수	단계	종속변수 (코로나정책수용)	
코로나정책태도	일반신뢰	step 1	$\beta_1$	-0.116**
		step 2	$\beta_2$	-0.008
		step 3(독립)	$\beta_3$	0.050
		step 3(매개)	$\beta_4$	0.495***
		$\beta_2-\beta_3$	$\beta'$	
	정부신뢰	step 1	$\beta_1$	0.589***
		step 2	$\beta_2$	0.180***
		step 3(독립)	$\beta_3$	-0.112**
		step 3(매개)	$\beta_4$	0.495***
		$\beta_2-\beta_3$	$\beta'$	0.292
	언론신뢰	step 1	$\beta_1$	-0.066*
		step 2	$\beta_2$	-0.077*
		step 3(독립)	$\beta_3$	0.044
		step 3(매개)	$\beta_4$	0.495***
		$\beta_2-\beta_3$	$\beta'$	

	규범	step 1	$\beta_1$	0.152***
		step 2	$\beta_2$	0.366***
		step 3(독립)	$\beta_3$	0.291***
		step 3(매개)	$\beta_4$	0.495***
		$\beta_2-\beta_3$	$\beta'$	0.075
	네트워크	step 1	$\beta_1$	0.065
		step 2	$\beta_2$	0.129**
		step 3(독립)	$\beta_3$	0.101**
		step 3(매개)	$\beta_4$	0.495***
		$\beta_2-\beta_3$	$\beta'$	
	온라인네트워크	step 1	$\beta_1$	0.116**
		step 2	$\beta_2$	0.091*
		step 3(독립)	$\beta_3$	0.034
		step 3(매개)	$\beta_4$	0.495***
		$\beta_2-\beta_3$	$\beta'$	0.057

#### 4. 분석결과의 종합

사회자본 요인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나,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낮았다. 코로나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정책에 대한 내면적 가치변화보다는 순응행동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1과 2를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와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가 차별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정책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 집단의 사회자본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과정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보면, 온라인네트워크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신뢰와 규범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회자본 변수에 따라 정책태도와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정이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모든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고, 정부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는 코로나정책순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신뢰 등의 사회자본이 정책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신과학기술의 수용에 관한 김서용 등(2010), 원자력정책의 수용에 관한 왕재선(2019)과 임다희 등(2016)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즉 정책에 대한 국민의 내적 가치체계인 태도의 구체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남성들은 일반신뢰와 언론신뢰 모두 코로나정책 태도 및 수용의 수용과 상반된 관계를 보여 성별에 따른 영향에 차이를 명백히 보였다. 일반신뢰의 경우 고령, 고학력, 고소득집단에서 코로나정책태도와 상반된 관계를 보였고, 고소득집단에서 정책수용과 상반된 관계를 보였다. 언론신뢰는 50대, 중위소득이상 집단에서 코로나정책태도, 고학력, 중위소득집단에서 코로나정책수용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상호신뢰가 정책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기철(2013)의 연구, 사회적 자본의 변인들 중 일반신뢰 수준이 이민자 수용인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허거훈·정혜진(202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이는 정책수용이 신뢰와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갖는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셋째, 규범은 모든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 코로나정책수용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나타났고, 규범준수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도 코로나정책수용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서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따르는 수용의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목희 등(2020)의 연구, 사회자본 변인 중 규범요인만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이었다는 신경아·한미정(2009)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규범준수 제고를 위해 정책과정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간 제도화된 공감 형성을 위한 명확한 대안과 기준의 공유를 제시한 강권오(202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는 남성, 고졸에서 코로나정책태도와 긍정적 관계, 20-30대, 대학원재학이상, 200-400만원에서 코로나정책수용과 정적 관계를 가졌다. 온라인네트워크는 여성, 40대와 50대, 대졸에서 코로나정책태도와 긍정적 관계를 보였고, 남성, 50대, 고졸이하, 200만원 미만에서 코로나정책수용과 정적 관계를 가졌다. 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를 통한 수용에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온라인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상황에서 코로나정책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를 통해서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온라인 소통은 온라인 사회자본뿐만 아니라 면대면 오프라인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구(2010)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상호네트워크와 정보교류가 정책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기철(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의 코로나 위기 상황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 사회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수용의 관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집단별 코로나정책수용 제고를 위한 사회자본 제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이상 전 연

령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태도 및 코로나정책순응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코로나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 요인 중 규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언론신뢰는 낮았고, 코로나 정책순응이 정책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코로나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의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모든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서 정부신뢰가 코로나정책태도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고, 규범은 코로나정책순응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유일한 변수였다. 반면 일반 신뢰, 언론신뢰, 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정책태도와 코로나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었다.

셋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순응의 영향경로에서 온라인네트워크는 코로나정책태도의 완전매개를 통해서 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부신뢰와 규범은 코로나정책태도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는 코로나정책순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영향을 미쳤다. 규범준수는 코로나정책태도의 통제 하에서도 코로나정책순응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정책태도를 매개를 통해서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정책 태도와 순응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코로나 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이해시키고 정책성고가 장기적으로 국가공동체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 특히 정부신뢰의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정부신뢰는 특정 정책의 시행을 통해 단번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코로나정책수용이 코로나정책성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다른 정부정책의 성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코로나정책은 독립적이지 않아 이전의 전염병 대책이었던 메르스 정책과 비교되면서 그 긍정성을 K방역으로 인정받았던 반면에, 2020년도 후반부터는 부동산관련 정책실패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백신 확보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위드 코로나 등과 관련해 코로나정책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확대되고 국민의 수용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신뢰의 제고가 단순히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정부신뢰의 확보를 위해서는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강권오, 2021). 이를 위해 코로나정책과정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 반복적인 소통매체가 필요하다. 코로나의 위험요인과 코로나대응정책의 기회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신뢰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정책 수용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지윤·차용진, 2019). 코로나 대응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의 당위성과 발

생가능한 문제의 제시와 더불어 코로나대응정책의 이익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대응정책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순응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자본 요소 중 규범준수를 통해 코로나정책순응행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공동체 규범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코로나 대응 규범에 대한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국민의 자유제한과 관련된 코로나정책 기준에 대한 효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위한 제도의 구축과 실행이 중요하다.

넷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집단을 고려한 코로나19 정보제공이 정부신뢰와 코로나정책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어 집단별 코로나19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한정된 매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대응정책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해 왔다. 향후 집단별로 선호하는 매체와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집단별 코로나19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국민이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내용이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이 절실하다.

다섯째, 오프라인네트워크보다는 온라인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자본이 코로나정책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온라인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제공자와 정보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온라인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코로나정책순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정책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성별·연령·학력·소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자본, 코로나19 정책태도 및 순응에 한정된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분석자료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와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사회자본과 코로나정책수용의 영향관계, 사회자본과 정책순응의 경로에서 정책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사회자본의 영향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과 정책수용 간 영향관계의 다양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정책수용에 대한 양적 연구의 부족으로 측정도구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 정책에서의 태도와 순응에 대한 이론적 틀과 측정 방법 등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권오(2021).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통한 정책 유형별 갈등과 순응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영복(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김 구(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5-44.
- 김기철(2013). 「관광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관광개발정책수용태도와 관광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서용·최상옥·김동근(2010). 新과학기술 수용성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9(1): 211-244.
- 김이경·김지혜(2014). 교육정책 집행요인이 교원의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창의경영 학교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2(4): 223-244.
- 김재근·권기현(2007).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국정학회보」. 16(4): 177-200.
- 김준환(2005). 사회자본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관한 고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권: 311-329. 일본연구센터.
- 김태심·조영호(2021). 코로나 19 사태와 정부신뢰. 「국가전략」. 27(1): 39-68. 세종연구소.
- 김혜연(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김효진(2012). 「정책집행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수관(2013). 개인의 사회자본적 속성과 환경보호의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3): 361-387.
- 문영세(2019). 정부신뢰 측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25(1): 121-150.
- 문정화·김수진·성기옥(2021).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1): 285-307.
- 민 기(2009). 지역 주민의 농촌성(Rurality)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53-71.
- 박경돈(2013). 산업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용성. 「지방정부연구」. 17(3): 1-22.
- 박재근·장현주(2012). 사회보장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미래세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317-344.
- 박희봉·송용찬(2018). 공·사조직의 조직 문화와 조직 사회자본: Hofstede의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32(3): 381-403.
- 신경아·한미정(2009).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에너지 절약행동의도에 미

-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1(3): 126-158.
- 오은비·김태형·이연택(2019). 지역관광축제정책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과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1(3): 49-70.
- 오현진(202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1): 1-35.
- 왕재선(2019). 정책 참여, 정부 신뢰 그리고 정책 수용: 원자력 정책 사례. 「한국행정연구」. 28(1): 33-60.
- 윤종빈·김소정(2019).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사회과학연구」. 27(1): 8-3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준호(2010). 한국적 사회자본에 관한 고찰.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 논문집」. 24(4).
- 이지운·차용진(2019). 기후변화 위험커뮤니케이션이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임다희·이소담·권기현(2016). 정책결정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한국정책학회보」. 25(2): 245-281.
- 정목희·모연화·박현순(2020). 코비드-19 마스크 착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1233-1248.
- 정원준(2017). 정책 결정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9(3): 99-135.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2015).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현·정문기(2019).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1): 3-36.
- 정호용(2020). 정책 수용 단계에 따른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3): 1-26.
- 조영호(2019).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MERS)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한국정치연구」. 28(2): 167-193.
- 주경일(2019).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조직-공중관계성 이론의 적용. 「한국정책연구」. 19(3): 47-72.
- 최유석·한미정(2014). 공공갈등 이슈에 대한 정부의 갈등관리전략이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5(1): 91-125.
- 하동엽·김갑성(2017).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수용도 영향요인과 정책수용도와의 영향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35(1): 263-285, 한국교육행정학회.
- 하민철(2020). 사회적 자본과 공유자원 관리: 미호천 유역공동체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2(2): 71-100.
- 하민철·한석태(2013). 도시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정책수용성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363-387.
- 허거훈·정혜진(2020).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9(4): 145-171.

허성민·양지연(2021).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코로나19 관련 국내 논문의 주제 및 감성에 관한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4): 31-42.

Anderson, J. E.(1984). *Public Policy Maki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Auera, A., Belowa, J. Von, Nahuelhuald, L., Mastrangelo, M., Gonzalez, A., Gluchg, M., Vallejosi, M., Staianoi, L., Laterra, P., & Parueloi, J.(2020),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Actions in Natural Capit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107: 168-178.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Coleman, James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Coleman, James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reyer, S. J. & Waker, I.(2013). Acceptance and Support of the Australian Carbon Policy. *Soc Just Res*. 26: 343-362.

Duncan, W. J.(1981).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iti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Fukuyama, F.(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Grunig, J. E. & Hunt, T.(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Jones, N. & Clark, J. R. A.(2014). Social Capital and the Public Acceptability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A Case Study in Romney Marsh, UK, *Climatic Change*. 123: 133-145

Jones, N., Clark, J. R. A., Panteli, M., Proikaki, M., & Dimitrakopoulos, P. G.(2012)., Local Social Capital and the Acceptance of Protected Area Policies: An Empirical Study of Two Ramsar River Delta Ecosystems in Northern Greec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6: 55-63.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ton, Kenneth(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March/April. 575-586.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Tocqueville, Alexis de. (1835). *Democracy in America*(은은기 역, 2013, 「미국의 민주주의」).  
계명대학교 출판사.

---

\* **송용찬(宋容贊)**: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산업표준심의회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표준인증안전학회지 10권 4호), 공·사조직의 조직 문화와 조직 사회자본: Hofstede의 모형을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회보 32권 3호)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표준정책, 인사성과관리, 지방자치이다(syc2070@cau.ac.kr).

\* **김유화(金裕和)**: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으로 사)한국여성의정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영상매체학 박사학위를 취득(2008)했으며, MBC 아나운서와 5·6대 여수시 의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미디어 수용자이다(01040541154@hanmail.net).

논문투고일: 2021.8.24 / 심사일: 2021.9.3 / 게재확정일: 2021.9.15